

바다로? 육지로? 운반방법 법규정조차 없어 쌓이는 핵공포... 국민안전 걸고 '폭탄돌리기'

긴급진단
한계 달한 한빛원전 핵폐기물

<중>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

영광 한빛원전 내에 임시 보관중인 중저준위 핵폐기물이 한계에 달하자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최근 1차분(200ℓ 들이 1000드럼)을 해상으로 이송하려 했으나, 안전성을 우려한 어민들의 반발로 무기한 연기됐다.

한수원은 원전 당국이 자초한 '원전 가동 중단'만은 피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핵폐기물 '육상(차량) 이송'에 대한 검토를 2개월 전 원자력환경공단에 의뢰했고,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도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이다. <광주일보 11월 7일자 1면>

문제는 외부에 무방비로 노출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확실시되는 핵폐기물의 이송 방식(수단)에 관한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법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사업자(한수원)와 운반자(원자력환경공단)가 운송 방식과 수단, 시기를 협의해 핵폐기물을 운반해도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법적 규제를 못한다는 것이다.

◇어민들 "해상이송 졸속 추진 반대" = 25일 한빛원전과 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원자력환경공단 측은 1년여 전부터 영광수협을 중심으로 중저준위 핵폐기물 해상 이송을 위해 주민 설득 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역 어민들은 ▲안전성 검토 미 실시 ▲영광~월성간 시험운행 미 실시 ▲안전성을 중심으로 한 사전 설명 미 실시 ▲조입 손실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원전 당국이 추진하는 해상이송을 반대하고 있다.

핵폐기물을 운반할 선박 접안을 위해 원전 앞바다를 준설해야하는데 허가권을 쥐고 있는 영광군도 어민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탓에, 원전당국은 국민 반발을 감수하고서 중저준위 핵폐기물 일부를 육상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은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늦어도 내년 초까지 한계에 달한 중저준위 핵폐기물 일부를 경주 방폐장으로 옮기지 않으면 원전 당국 스스로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첫 해상 운반 어떻게 이뤄지나=원자력환경공단이 한빛원전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해상으로 이송하기로 한 것은 해상

■영광~월성 핵 폐기물 해상이송로



뱃길 이용에 어민들 반발

위험천만 육상운송 검토

차량 통과하는 市·郡 '기겁'

이송이 육상 이송보다 훨씬 안전하기 때문이다.

원자력환경공단이 작성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운반 안전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연안 해운에 비해 도로 운송과 철로 운송은 위험성이 각각 71배, 2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대량 이송으로 운송횟수를 줄일 수 있고, 인구 밀집지역을 피할 수 있으며, 국내 원전이 해안에 있는 점도 해상 이송을 추진하는 이유다.

해상 이송을 위해 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2009년 선박(청정누리호·2600t) 건조를 완료했고, (주)한진과 JK-ENG(주) 컨소시엄을 운항사로 선정했다.

선적항은 한빛·한울·고리원전 물양장, 하역항은 월성원전 물양장, 정박항은 월성원전 물양장 등이다. 한빛원전은 연 3회 운항할 예정이다.

영광~월성간 항로(표 참조)는 제주도 안쪽을 지나가는 안과 제주도 밖을 지나가는 안이 있으며, 항해거리는 843~902km다. 운항에 소요되는 시간은 40시간 안팎이다. 선박은 파고 2.2~3.2m, 초속 20~24m의 풍속까지 안전 운항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승선인원은 운반책임자 1명, 선원 17명, 방사선 안전관리자 2명이다.

<2면으로 계속>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순천만은 흑두루미 세상

겨울 진객 흑두루미가 25일 오후 순천만 인근 수확이 끝난 논에서 먹이를 찾고 있다. 시베리아에서 이곳으로 날아와 겨울을 지내는 흑두루미는 지난 해 500여마리에서 올해는 800여마리가 관찰돼 개체수가 점점 늘고 있다.

순천만=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5년
학부 정시모집
 12월 19일(금)~24일(수)
 문의: 062)605-1114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12월 1일(월)~9일(화)
 문의: 062)605-1115

남광주종합상가 불법 묵인 ▶6면
컬처&피플 '國舞' 이매방 ▶17면
24면 발행·호남 최대부수

대형마트, 지역환원엔 '자린고비'

전남서 6월까지 3800억 매출 지역 공익기여는 고작 2억원
황주홍 의원 분석 자료

전남도내 이마트·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11개 매장과 9개의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올 상반기에 올린 매출이 3800억원에 달한 반면 공적 기여도는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전남도내 대형마트와 SSM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20개 대형마트 매장과 SSM이 올들어 6월 말까지 벌어들인 매출은 모두 3834억 308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매출 6846억1366만원의 절반을 넘어선 수준으로 불황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매출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형마트와 SSM이 지역 내 공익사업에 기여한 액수는 2억 5027만원으로, 전체 매출의 0.06%에 불과했다. 또 지역 농산물 구매에 쓴 돈은 1313억7749만원으로 전체 매출의 34% 수준이었다.

이들 업체들이 고용한 전남도민은

244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0%에 달하는 977명이 비정규직이었다.

대형마트 매장의 매출 규모는 이마트 목포점이 가장 많았고 홈플러스 순천점, 이마트 여수점, 롯데마트 목포점, 이마트 순천점, 롯데마트 여수점, 롯데마트 여천점, 홈플러스 광양점, 홈플러스 목포점, 롯데마트 나주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들 국내 대형마트 3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난해 상품 70% 이상을 수도권에서 매입한 반면 광주에서는 0.5%(1078억원), 전남에서는 1.2%(2589억원)만 매입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광주의 경우 이들 3사의 지난해 매출액(6707억원) 대비 매입액 비율은 16.1%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과 대전에 이어 3번째로 낮았으며 전남의 경우도 매출(6099억원) 대비 매입액이 42.5%로 전국 9개 도 중 가장 저조했다.

황 의원은 "대형마트가 막대한 수익을 내는데도 지역 내 기여도가 미미한 것은 수익의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 28일 '시민회의'서 판가름 날 듯

광주시, 내달 초 최종 결정

시민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가 '광주공동체 시민회의'를 거쳐 내달 초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514명으로 구성된 시민회의가 광주시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도 일고 있다.

광주시는 25일 "오는 28일 광주공동체 시민회의를 개최, 도시철도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초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그동안 진행해 온 도시철도 2호선 TFTP 논의와 대구·대전 등의 다른 지역 사례 조사, TV토론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의견 청취 절차"라고 밝혔다.

시는 "시민회의에서 제시된 의견과 그동안 논의 내용을 토대로 내달 초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애초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공청회 대신 시민회의로 선회했다.

민선 6기에 구성된 시민회의는 시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전략 등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취지를 담은 이른바 '시민참여 기구'로 전체 회의가 소집된 것은 지난 10월 13일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첫 시민회의에는 공무원 등을 제외한 493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대의기구인 시민회의를 배제하고, 법적 대표성도 없는 시민회의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의 찬반을 묻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7개 분과로 구성된 시민회의 514명 중 상당수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인데다 인적구성도 특정 세대의 40~50대가 70%를 넘고, 남성 비율도 세대간 의견을 담기에 도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진수기자 lucky@kwangju.co.kr

더불어사는 광주 행복한 시민

150만 시민과 함께라면 어떤 꿈과 희망도 모두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